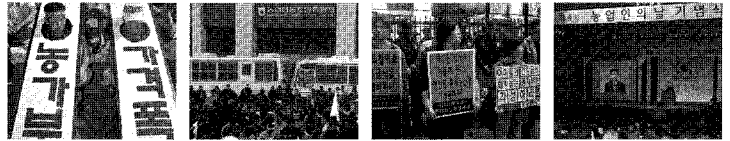


월간 한농연 선정

2003년 농업뉴스



그 어느 때보다도 400만 농민들을 힘겹게 했던 2003년이 저물고 있다. 특히 지난 9월 11일 “WTO가 농민들을 다 죽인다, WTO에서 농업부문을 제외하라!”고 외치고 자결했던 이경해 열사의 희생은 농민 뿐 아니라 많은 국민들의 심금을 울렸으며, 우리 농업·농민의 어려운 현실을 다시금 되돌아보게 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

올 봄 한농연 회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가구당 평균 농가부채가 1억 4천만원을 넘는 것으로 파악되어 작년 같은 기간동안의 조사결과보다 훨씬 심각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극심한 냉해와 태풍 ‘매미’가 몰고 온 사상 최악의 농업재해와 정부의 무책임한 쌀 감산 정책으로, 올해 쌀 수확량은 1980년 이후 23년만에 최대의 흉작을 기록하면서 쌀 자급기초 유지에 적신호가 켜졌다.

더욱이 우리 농업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으로 우려되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정부는 기존에 내세워 온 ‘선대책-후비준’ 원칙마저 무색케 하면서 연내 비준완료로 강행하고 있다. 아울러 이경해 열사의 자결로 촉발된 전세계 NGO의 반대 투쟁으로 결렬된 칸쿤 WTO 각료회의에서도 우리 농업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각료선언문 초안이 제출되는 등, 우리 농업은 그야말로 ‘거센 바람 앞의 등잔불’과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1. “WTO가 농민들을 다 죽인다!”…이경해 열사, WTO 반대를 외치며 자결
2. 11. 19 전국농민대회 성사…10만 농민의 단결로 만들어낸 농업·농민희생 한 목소리
3. 결코 물러설 수 없다…한-칠레 FTA 국회비준 저지 투쟁
4. 23년만에 최악의 쌀홍작…주곡 및 식량자급을 향상 대책 필요
5. 농업경영인 가구당 농가부채 평균 1억 4천만원…근본적인 부채 대책 조속히 마련해야
6.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길 수 없다”…협동조합 개혁 운동의 거대한 물결
7. 지역별 학교급식조례제정 급물살…학교급식법 개정 작업 조속히 마무리해야
8. 정부, 10년간 119조원 농업투융자 계획 발표…지역별 순회토론회, 농민 반응 ‘시큰둥’

하지만, 깊은 절망의 나라에서 농업·농민희생을 위한 희망의 등불은 더욱 거세게 타올랐다. 우루과이라운드(UR) 농산물협상 이후 10년만에 전국농민연대의 이름으로 뭉친 400만 농민들의 단결된 힘은, 갖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마침내 지난 11월 19일 10만명의 하나된 목소리가 되어 11. 19 전국농민대회를 성사시켰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겨서는 안된다”는 각성된 농민들은, ‘조합원이 주인 되는 근본적인 농협 개혁’을 앞당기는 든든한 밑거름이 되었다. 나주시와 전라남도 주민들의 의지를 통해 시작된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의 물결은 이제 전국을 휩쓰는 거스를 수 없는 물결이 되고 있다. 이경해 열사의 고귀한 희생은, 전세계 농민단체와 NGO(시민사회단체)들의 단결된 투쟁을 이끌어내어 전세계 농민의 이름으로 WTO 칸쿰 각료회의를 결렬시키는 성과를 낳았다.

많은 어려움과 난관을 극복하고, 400만 농민의 이름으로 ‘농업·농촌·농민의 근본적인 희생’과 ‘식량주권 사수’를 위해 소중한 전진의 한 걸음을 내딛었던 2003년, ‘월간 한농연’은 12월 송년 특집으로 ‘2003년 8대 농업뉴스’를 아래와 같이 선정하여 정리하였다.

- 편집자 주 -

8th News

1

“WTO가 농민들을 다 죽인다!”

… 이경해 열사, WTO 반대를 외치며 자결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 당일이었던 9월 11일 새벽, 400만 농민과 국민들은 크나큰 충격과 슬픔에 빠졌다. 한농연 제2대 중앙회장을 지낸 농민운동가 이경해 열사가 “WTO가 농민들을 다 죽인다, WTO에서 농업부문을 제외하라!”는 마지막 외침을 남기고 자결했다는 소식이 전세계 언론의 긴급속보로 타전되었다. 이경해 열사는 우리 농업·농촌·농민의 피폐한 현실과 전세계 영세 가족농의 생존권 상실의 위기를 알리기 위한 일념으로 기꺼이 온 몸을 던지신 것이다.



이경해 열사의 삶은, ‘세계화에 희생된 뛰어난 농사꾼의 삶’ 그 자체였다. 열사는 1974년 전라북도 장수의 척박한 산지를 개척하여 ‘서울농장’을 일구어 냈다. 그리하여 당시 우리나라 최초의 고랭지채소 농법을 도입하고, 낙농 부농의 꿈을 착실히 키워 나갔다. 더 나아가 열사는 피땀어린 노력으로 개척한 ‘서울농장’을 후배 농대생과 농민들에게 개방하고 열정을 다해 농법을 전파하였다.

하지만 1980년대 이후 농축산물 개방 확대 등 무분별한 정부의 개방농정은, 이경해 열사의 삶을 ‘성공한 선도개척농’으로서가 아닌, ‘실천하는 농민운동가’의 모습으로 옮겨가게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열사는 1987년 한농연의 전신인 ‘전국농어민후계자협의회’의 출범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장수군 및 전라북도 농어민후계자협의회 회장을 거쳐 제2대 중앙회장을 역임해 나가면서, 오늘의 한농연 조직과 이념 확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특히 우루과이라운드(UR) 농산물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던 1990년, 열사는 스위스 제네바의 GATT 사무국을 방문한 뒤 한국 농업의 어려움을 전세계에 호소하고자 할복 자결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후 열사는 전북도의회 의원을 역임하면서 지역농업 및 한국 농업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의 수립·집행에 힘을 기울였다. 특히 열사는 의원 임기 내내 청빈한 생활을 통해, 한농연 및 400만 농민들에게 살아있는 농민운동의 모범이 되었다.

이역만리 칸쿤에서 고귀한 생명을 바친 이경해 열사의 희생은, 전세계에서 모여든 NGO 및 농민

단체들의 WTO 각료회의 저지 투쟁에 소중히 믿겨림이 되었다. 그리하여 마침내 9월 15일, 마침내 칸쿤 각료회의는 공동 선언문의 채택 없이 결렬된 채 끝났으며, 풍전등화의 우리 농업을 살리려는 국민들의 관심과 논의의 불을 댕길 수 있었다. 하지만, 한농연 12만 회원과 400만 농민은 우리나라 농민운동의 큰 별을 잃는 쓰라린 아픔을 겪어야만 했다.

8代 News

2

11. 19 전국농민대회 성사...10만 농민의 단결로 만들어낸 농업·농민회생 한 목소리

11월 19일 서울 여의도와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 모인 10만의 농민들이 하나된 목소리로 농업·농촌·농민회생을 촉구했다.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UR) 농산물협상 당시 서울역 광장에서 600만 농민의 힘으로 '우리쌀·우리농업 사수'를 외친지 10년 만에, '전국농민연대'를 중심으로 뭉친 농민단체들은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11. 19 전국농민대회를 성사시켰다.

한농연은 올 봄 이후 11. 19 전국농민대회의 개최를 계획하고 준비해 왔다. 특히 7월말부터 8월 중순까지 이어진 각 도별 농업경영인대회를 통해, 한농연 각 도 임원을 주축으로 11. 19 전국농민대회 준비위원단을 발족시켰다. 아울러 한농연 홈페이지 및 각 도 농업경영인대회장에서의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11. 19 전국농민대회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9월 11일 이경해 열사의 자결은 비상사태에 처한 한국 농업을 구해야 한다는 400만 농민들의 공감대를 형성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하여 10월 2일 전국농민연대 대표자들은, 11. 19 전국농민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후 전국농업기술자협회 건물 내에 공동 상황실을 꾸렸으며, 각 도 및 시군에서도 농민단체들의 공동 준비작업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바쁜 수확기와 짧은 준비기간 등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전국 농민대회는 순조롭게 준비되었다.



특히 정부의 119조원 농업투융자 계획 발표와 농민단체협의회 및 농협중앙회의 한-칠레 FTA 조건부 찬성 성명서 발표 등에도 연이은 악재가 터져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농민연대를 중심으로 뭉친 농민들은, 단결된 힘으로 서울 여의도와 대학로 일대에서 10만의 농민들이 모인 가운데 성공적으로 11. 19 전국농민대회를 성사시켰다. 이로써, 농업보호와 생존권 쟁취를 촉구하는 400만 농민들의 의지를 분명하게 전달시키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8th News

3

결코 물러설 수 없다

... 한-칠레 FTA 국회비준 저지 투쟁



올 한 해를 가장 뜨겁게 달군 이슈는 단연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의 국회비준 문제였다. 2월 15일, 농민들의 거센 시위와 항의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칠레 대통령의 방한에 맞춰 한-칠레 FTA 정식서명을 교환하였다. 이후 출범한 노무현 정부 또한, “선대책-후비준”의 원칙을 내세우며 한-칠레 FTA 협정의 정식 발효를 목표로 국회비준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작년 10월 말 가서명 이후 한농연이 주도하여 전개한 “한-칠레 FTA 비준 반대 국회의원 서명운동”이 2월 이후 탄력을 받으면서 총 147명의 국회의원이 서명운동에 동참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4월 초에 출범한 전국농민연대를 중심으로 여야 정치권에 대한 압박작업 및 지역 농민들의 릴레이 천막농성·대표자 단식농성 등을 전개해 왔다. 특히 6월 20일 전국 동시다발로 전개된 고속도로 차량 시위 과정에서 경찰 강경진압으로 다수의 부상자와 구속자가 발생하는 등, 농민들은 많은 희생을 감수해 왔다.

8월 임시국회까지 성공적으로 진행된 한-칠레 FTA 국회비준 투쟁은, 9월 정기국회 이후 새로운 기로에 서 있다. 7월 8일에는 ‘FTA이행특별법’이, 11월 10일에는 ‘한-칠레 FTA 비준 동의안’이 각각 국회 내 해당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었다. 또한 고건 총리를 비롯한 정부-정치권 대표들은 12

월 11일 연석회의에서, 한-칠레 FTA 비준동의안을 12월 18일까지 반드시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400만 농민들의 FTA 저지 투쟁은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11월 19일 및 12월 6일 전국농민대회를 통해 표출된 농민들의 FTA 저지 의지는, 12월 8일의 본회의 직권상정 저지 상경투쟁을 시작으로, 국회의원 지구당사 점거 농성과 국회의원 선친 묘소 제사 투쟁 등 다양하게 전개되어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가 끝나는 내년 1월 8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8th News

4

23년만에 최악의 쌀흉작 ... 주곡 및 식량자급을 향상 대책 필요

극심한 냉해와 많은 비, 태풍 '매미'로 인한 사상 최악의 농업재해로 인해 올해의 쌀농사는 1980년 이후 23년만에 최악의 흉작을 기록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올해의 쌀 작황이 당초 예상 수확량보다 훨씬 줄어든 3,091만석에 그치고 품질도 떨어지는 것으로 최종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의 3,422만석보다 무려 9.7% 감소하였다. 이는, 올 10월초 표본 조사를 통해 추정된 예상 생산량(3천121만석)보다 0.96%(30만석)가 줄어든 수치이다. 단보(302.5평, 10a)당 생산량도 441kg으로 당초 예상치(445kg)보다 줄면서 평년(최근 5년간 평균치)의 491kg에 비해서는 10.2%나 줄어든 것이다.

이와 같은 쌀 수확량의 급감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이미 올 여름 이후 굵은 날씨와 태풍 '매미'로 인해 흑수·백수 피해가 나타나고 병충해와 저온 피해도 심했지만, 정부의 선부른 쌀 감산정책이 이번 대흉작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는 지적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작년 가을 및 올 봄 농림부가 추진했던 쌀 생산조정제와 소득보전직불제 등의 정책은, 농민들의 영농의욕을 크게 꺾어 놓았으며, 그 결과 쌀 생산면적 및 생산량 감소를 초래한 직접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 것이다.



심각한 쌀 재고 감소와 쌀 수입 압력 증대 등으로 인해 식량안보 유지의 적신호가 켜지고 있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주곡인 쌀을 포함한 총괄적인 기초식량 자급계획을 법제화하라는 한농연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대신 “(개방 전에는) 식량수급계획의 법제화는 힘들다 (오마이뉴스 기사)”는 입장만을 되풀이하고 있을 뿐이다.

농림부는 “재고미(842만석) 등까지 포함하면 내년 쌀 총공급량은 4,076만석으로, 식량용(2,808만석) 등 전체 소비량(3,374만석)을 충족하고도 내년 10월말 재고미가 702만석에 달하는 등 식량 수급 문제는 없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권고 적정 재고량(573만 607만석)을 상회하고 있다”며 자신하고 있다. 그러나 쌀 대북 지원은 작년이나 올해처럼 278만석(40만t)을 지원하는 방식을 유지하기는 힘들 전망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재고미는 발생할 수밖에 없으므로 쌀 생산조정제는 예정대로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8th News

5

농업경영인 가구당 농가부채 평균 1억4천만원
... 근본적인 부채 대책 조속히 마련해야



농업경영인들의 가구당 농가부채 평균이 1억 4천만원을 훨씬 뛰어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부가 공식 발표한 가구당 농가부채는 1,99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정부 통계에 대한 농민들의 불신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금년 5월 한농연중앙연합회가 전국 회원 58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농가부채 현황 조사에 따르면 농업경영인들은 평균 1억 4천만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2002년 같은 기간 실시한 1억 2천만원보다 훨씬 악화되었다. 특히 축산 및 원예, 특작 등에 종사하는 농업경영인들의 농가부채가 일반 경종 농가들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 농가부채 상환방법 또한 가계대출이나 자산매각·예금해지 등의 방법까지 동원되고 있어, 농가경제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같이 심각한 농가부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농업경영개선자금과 상호금융대체저리자금 등의 금리를 3%까지 낮추고, 신규 상호금융 및 정책자금 금리를 지속적으로 낮춰 나가려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농가부채특별법 개정안은, 이미 대출된 정책자금의 금리를 1.5%까지 인하하고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어 미흡하다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다. 농업경영개선자금과 상호금융대체저리자금의 금리 인하도 한-칠레 FTA 국회 비준용 '떡고물' 정도로만 제시되고 있을 뿐이다.

8th News

6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길 수 없다” ... 협동조합 개혁 운동의 거대한 물결

2000년 7월 통합 농협중앙회의 출범 이후, 2003년 올해는 실질적인 제2단계 협동조합 개혁 운동을 기치로 농민단체들의 단합된 역량으로 대응한 뜻 깊은 한 해였다. 특히 1999년 농업관련 협동조합 중앙 조직의 통합 당시 분열과 대립의 양상을 보여줬던 농업계가, 4월 10일 “농민 조합원이 주인 되는 협동조합 개혁 선포식”을 시작으로 모처럼 하나된 목소리로 농협 개혁 작업에 박차를 가하게 된 것 자체가 커다란 의의를 지니는 것이다.

4월 초 서울에서 시작된 협동조합 개혁 선포식의 물결은 6월말까지 전국을 휩쓰는 거대한 파도가 되었으며,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길 수 없다”는 속담은 농협 개혁의 필요성을 알리는 유행어처럼 번져 나갔다. 이후 전국농민연대는 농협법 개정 및 농협중앙회 신경분리와 시군지부 폐지 등을 골자로 한 “협동조합 개혁 20대 과제”를 발표하였다.



하지만 이들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출범한 농협개혁위원회는, 농협중앙회의 개혁 반대 움직임 속에서 파행을 거듭했다. 마침내 7월 8일 전국 곳곳에서 근본적인 농협 개혁을 촉구하는 농민들의 집거농성 투쟁이 전개되어, 7월 11일 전국농민연대와 농협중앙회는 중앙회 신경분리 추진 1시군 1농협 지역 13개 시군지부 폐지(중앙회 신용지점으로 전환) 등을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농협중앙회는 9월말 농림부가 제출한 농협법 개정안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만들고자 정부와 정치권에까지 무차별 로비공세를 전개하고 있다. 이에 내년 4월 총선 및 5월중 16대 국회의 원 구성까지의 기간이 법률 개정 등 농협 개혁 작업의 마지막 기회가 될 전망이어서, 400만 농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절실하다.

8th News

7

지역별 학교급식조례제정 급물살

... 학교급식법 개정 작업 조속히 마무리해야

2003년은 한농연 및 농민·시민사회단체들이 줄기차게 추진해 온 학교급식법 개정 및 학교급식조례 제정운동은,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기초·광역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조례 제정이라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서명운동 동참을 통한 주민발의를 통해 지역 내 우수 농축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청소년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학교급식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학교급식조례 제정운동 및 학교급식법 개정 운동은 이제 전 국민적인 관심사로 새롭게 제기되는 전기를 마련하였다.

올해 전국 최초의 학교급식조례제정의 모범사례를 만들면서 전국적인 학교급식 개혁운동의 물결의 선봉에 선 곳은 전라남도였다. 나주시의회와 주민들은, 정부 중앙부처와 전남도청의 이의 제기 등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올 7월 최초의 학교급식조례를 제정하였다. 이미 전남도민 5만명 이상의 서명을 토대로 주민발의를 통해 조례 제정을 추진해 왔던 전라남도 또한, 도청 및 교육인적자원부·행정자치부 등과의 유권 해석을 둘러싼 난관을 극복하고 '전라남도 학교급식조례'를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제정하는 데 성공하였다.

특히 전라남도 및 나주시 학교급식조례 개정에 있어 한농연 전라남도연합회가 수행한 역할은 남다른 것이었다. 주민발의를 위한 서명운동 및 중앙 정부부처와 도청과의 유권해석 등을 둘러싼 수많

은 논쟁의 최일선에서 전통 식문화 교육과 청소년 건강 증진을 위한 학교급식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자치 관련 예산 수립 및 집행'에 관련된 논쟁이 격화되었던 을 가을에는, '전남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가 주축이 된 대표단이 행정자치부를 직접 찾아 투쟁을 전개하는 등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지방 차원의 조례제정운동은 전남을 시작으로 전국 곳곳에 들불처럼 번져 나갔다. 각 도 및 시군에서는 학교급식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단체간의 연대의 틀이 만들어졌다. 또한, '학교급식조례 제정 및 학교급식법 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가 11월 발족하게 되면서, 좀더 체계적인 학교급식 개혁 운동의 틀이 만들어지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 결과, 11월 12일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에 필요한 음식재료비를 초·중·고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와 협의하여 '학교급식법 시행령'을 을 12월말까지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더욱 가시적인 개선 성과를 날게 되었다. 하지만, 국산 우수 농축산물을 학교급식에 우선 사용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아직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채 계류중이다.

8ft News

8

정부, 10년간 119조원 농업투융자 계획 발표 ... 지역별 순회토론회, 농민 반응 '시큰둥'

전격적인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한-칠레 FTA 비준안 상정 다음날인 11월 11일, 노무현 대

통령은 총 119조 원 규모의 농업투융자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같은 날 농림부는 119조원 규모의 “농업·농촌지원대책(안)”을 발표하여, 전체 농림예산 중 농업투융자 사업과 직접 연관이 있는 사업성 예산의 규모를 증대시켜 나가겠다고 하였다.



정부는 향후 10년간 예산 94조원 및 기금 25조원을 들여, 88조원 규모의 보조사업과 31조원의 융자사업을 진행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연도별 투융자 규모를 연평균 7.8%씩 증가시킬 것이며, 2008년까지 5년간 투융자 소요액 51조원에 대해, 국가 중기 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하여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정부는 119조원 농업투융자 계획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농업·농촌·농민의 현실을 감안한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의욕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한-칠레 FTA의 국회비준 문제와 11. 19 전국농민대회 등 매우 미묘한 시점에서 발표된 119조원 규모의 농업투융자 계획에 대한 농민들의 반응은 냉담한 실정이다. 이같은 농민들의 반발 움직임은 11월 24일부터 12월 4일까지 이어진 농림부의 도별 순회 토론회가 줄줄이 무산되면서 가시적으로 나타났다. 농민들은 당장 구체적인 사업 계획에 대응한 운용 계획 및 재원 확보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대통령 임기 내 51조원의 투융자 재원이 마련될 수 있겠느냐는 입장이다. 게다가 농민들이 즐기치게 요구해 온 농림예산의 국가예산 대비 10% 이상 확보마저도, 대통령이 스스로 나서서 “이상한 예산이 될 것이다. 제발 잊어 달라”고 발언하여 좌절된 상태에서, 과연 농업투융자 예산 확보가 가시화될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마저 제기되고 있다.

한농연의 요구사항과 같이, 미국·일본 등과 유사한 수준의 중장기 농업정책 및 소요 예산에 대한 법제화 등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자칫 김영삼 정부 당시 ‘농어촌 구조개선사업’ 당시와 같은 ‘눈먼 돈’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 또한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한농연**